

보도시점 2024. 5. 14.(화) 11:00
5. 15.(수) 조간

배포 2024. 5. 14.(화) 09:00

가공식품·외식 물가 상승폭은 점차 하락 추세

- 정부는 식품·외식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·외식 물가안정 노력 지속 추진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)는 최근 가공식품·외식 물가 동향에 대해 물가 상승폭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,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가공식품·외식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현장 애로 과제를 적극 발굴·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.

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상승폭은 '22년 하반기 이후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. 다만, 최근 높은 국제유가·환율 및 코코아두·과일농축액·올리브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제품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.

* 소비자물가(전년동월비, %): ('22.7) 6.3<고점> → ('24.2) 3.1 → ('24.3) 3.1 → **('24.4) 2.9**
가공식품(전년동월비, %): ('22.12) 10.0<고점> → ('24.2) 1.9 → ('24.3) 1.4 → **('24.4) 1.6**
외식(전년동월비, %): ('22.9) 9.0<고점> → ('24.2) 3.8 → ('24.3) 3.4 → **('24.4) 3.0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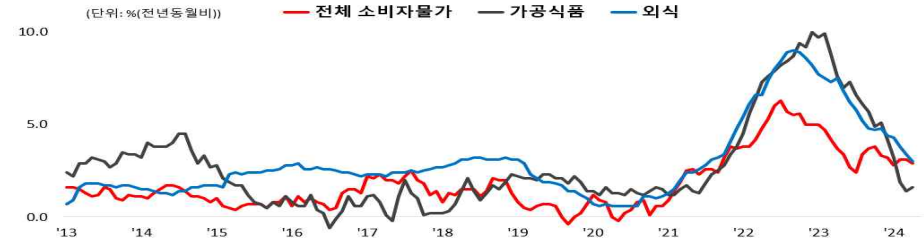
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식재료비를 포함하여 인건비, 공공요금, 물류·유통 등 다양한 비용이 복합 반영되는 구조이다. 특히, 외식 물가는 상품(음식)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, 식재료비 외 인건비·공공요금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다른 분야에 비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특성이 있다.

지난 '21년 하반기 이후 심화된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, 전기·가스·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,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외식업체의 경영 부담이 누적되며 외식 물가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나,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.

* 식품산업 비용구조: 식재료비 37%, 물류·유통 17.7%, 에너지 12.4%, 인건비 10.6% 등
외식산업 비용구조: 식재료비 42%, 인건비 33%, 임차료 10%, 공공요금 7%, 기타(수수료 등) 8%

** 최저임금: ('21) 8,720원/시간 → ('24) 9,860(13.1%↑, 통상임금 15천원, 최저임금 대비 52.1%↑)
공공요금(전기·가스·수도) 물가상승률(전년비, %): ('22) 12.6% → ('23) 20.0 → ('24) 4.9

<참고: 전체 소비자물가·가공식품·외식 물가 추이('13~, 전년동월비) >



정부는 그간 기업 원가 부담 및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·세제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,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가격 인상 시기 이연, 인상률·인상품목 최소화, 인하 제품 발굴 및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. 또한, 세계식량가격지수도 고점 대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원가 부담도 완화되는 추세이다.

*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(95개)을 조사하여, 5개 품목군(곡물, 유지류, 육류, 유제품, 설탕)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, 발표(2014-2016년 평균=100)

** ('22년) 144.7<고점> → ('23년) 124.7 → ('24.1) 117.7 → (2) 117.4 → (3) 118.8 → (4) 119.1

우선,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·연장 등을 검토하고, 중소 식품·외식기업의 식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원료매입자금도 지속 지원하고 있다. 특히, 외식업의 경우 올해부터 신규로 적용하고 있는 고용허가제(E-9)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.

- ① ('24년 31개 품목) 감자변성전분, 땅콩, 설탕, 커피생두, 코코아두(신규, 5.10~12.31.) 등
- ②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: 968억원, 외식업체육성자금: 300억원 규모
- ③ (규모) 17천명, (지역) 100개 지자체, (업종) 한식점업(주방보조 분야)

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“식품·외식 물가는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만큼, 정부는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.”라고 말하며, “업계에서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가공식품>	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영수 (044-201-2111)
		담당자	사무관	정명희 (044-201-2123)
<외식>	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재경 (044-201-2151)
		담당자	사무관	박태준 (044-201-2157)

